

I. 개 요

1. 일시 : 2010. 10. 29. (16:00~18:00)

2. 장소 : 본원 9층 회의실

3. 발표자

- ☐ 바오젠둥 원장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 ☐ 진쩌 소장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 ☐ 장시구오 회장 (북방무역유한공사)

4. 참석자

- ☐ 원내 참석자(3명)
 - 조명철(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홍익표(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 이종운(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 ☐ 원외 참석자(7명)
 -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
 - 김승영 (삼성전자, 부장)
 - 오미희 (통일부, 서기관)
 - 심남섭 (무역협회, 실장)
 - 김동엽 (국방부, 중령)
 -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 ☐ 중국 참가자(10명)
 - 바오젠둥 (요녕성 사회과학원, 원장)
 - 진쩌 (요녕성 사회과학원, 소장)
 - 마샤오핑 (요녕성 사회과학원, 외사처장)
 - 우잉즈 (요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 장시구오 (북방무역유한공사, 회장)
 - 진강르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 원장)
 - 청샤오허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전략연구소, 소장)
 - 만하이핑 (요동대학교 동북아센터, 소장)
 - 진메이즈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 장창 (단동북방공무유한공사, 사장)

5. 제 목

- ☐ 최근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중경협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요녕연해지역 개발과 중·한 경제협력”

- ☐ 요녕연해지역의 기본상황
 - 요녕연해지역은 황발해지역에 인접되어 있고 다롄, 단둥, 진조우, 잉코우, 판진, 후루도 등 6개 연해도시가 포함하고 있음.
 - 육지면적은 5.65만km², 해안선 길이는 2,920km, 해역면적은 6.8만km²이며, 2009년말 통계를 기준으로 1,7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음.
 - 2009년 요녕연해지역 6개 도시의 GDP는 요녕성 전체의 58.3%, 지방재정 일반예산수입은 요녕성 전체의 46.9%, 고정자산투자자는 요녕성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음.

□ 연해지역개장의 전략적 의의

- 2009년 7월 1일 “요녕연해지역발전계획”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되었음.
-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고려가 깔려있음.
 - 첫째, 중국연해경제 발전의 수요, 즉 새로운 경제성장지역의 육성을 통해 전국 연해지역 공동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는데 유리함.
 - 둘째, 국가 지역발전의 총체적인 전략 실시에 유리함.
 - 셋째,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적극적인 참여에 유리함.

□ 요녕연해지역의 공간배치, 산업지위의 확정과 발전목표

- 요녕연해지역개발의 총체적인 틀은 공간배치에서 <일핵, 일축, 양익>을 체현하는 것임.
- “일핵”은 다렌의 핵심지위를 격상하고, <일축>은 <다렌-잉코우-판진> 주축을 강화하며, <양익>은 발해익<판진-진조우-후루도우>과 황해익<다렌-단둥 황해연안과 주요 섬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임.
- 산업배치에서는 선진장비제조업, 원자재공업, 전자생물 등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현대농업을 주요산업으로 확정하였음.
- 발전목표: 요녕연해지역을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중요한 장, 동북아의 중요한 국제항운중심, 국제경쟁력이 있는 연해산업지역, 생태환경이 조화롭고 주거환경이 좋은 새로운 경제성장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임.

□ 요녕연해지역개발 현황과 특징

- 첫째, 요녕연해지역은 빠른 경제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요녕연해지역개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격상된 이후 연해지역 6개 도시는 새로운 발전목표를 확정하여 경제개발구 건설과 연해산업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대대적인 인프라건설과 외자유치에 주력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둘째, 외국인 투자가 양호한 발전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요녕연해지역은 월등한 성장잠재력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싱가포르의 万邦그룹, 타이완의 富士康그룹, 한국의 STX그룹, 호주의 阿斯创회사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입주하였음.
- 셋째, 요녕연해지역과 동북배후지역 간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있음.

□ 요녕연해지역과 한국간 경제협력

- 경제협력의 이점
 - 첫째, 지정학적 우세
 - 둘째, 정책적 우세
 - 셋째, 자원과 산업의 보완우세
 - 넷째, 대외개방 우세
- 요녕연해지역과 한국간 경제협력 발전방향
 - 첫째, 요녕연해지역에 중·한 자유무역구를 설립하여 양자간 무역발전을 추진
 - 둘째, 요녕연해지역에 한국경제개발구, 한국공단 등을 설립하여 대한국 투자유치에서 돌파구를 마련
 - 셋째, 더 많은 한국자본, 기술집약형 기업의 대요녕연해지역 투자를 격려
 - 넷째, 관광업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하여 상호간 홍보협력 메커니즘을 형성

- 다섯째, 한국금융업의 대요녕성 투자를 확대
- 여섯째, 녹색성장, 하이테크, 서비스업 등 영역의 협력을 탐구하여 양자간 새로운 협력모델을 형성

2) 토론 내용

< 최근 북중관계 >

- 최근 중국 정부의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건설계획의 발표에 따라 중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북관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을 동북아지역 협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돋보임.
 -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대북정책기조를 형성하였던 지연정치 가치의 추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연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함.
 - 냉전시대로부터 강택민정권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대북정책은 기조적으로 그 지연정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였는데 그 와중에는 북한을 중국의 전략적인 완충지역으로 간주한 경향이 짙게 깔려 있었음.
 - 하지만 중국국내의 지역적인 격차의 심화와 동북아지역에서의 새로운 발전 공간 개척의 필요성으로 인해 후진타오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지연 경제적 가치를 이용하여 북중 경협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전략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뢰도가 높은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음.

- 개혁개방을 완강히 거부하고 두만강유역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북한이 금년 1월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했고 “라선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하였으며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립하였음.
-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물론 그 경제난의 한 개 타개책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중국에도 일정한 체면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작용했을 것임.
-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이건 한국이건 모두 상당한 고민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과 딜레마를 푸는 과정에서 한중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 효과는 배로 증대될 것임.
- 그러나 최근 한국과 중국은 모두 상대방의 대북정책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음.
- 중국은 한, 미, 일의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는 그 무엇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근심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편이 되어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북한발 변화나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간의 협력이 없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정확히 판독하고 또 가능한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 또 이러한 시각에서 북중경협이 한반도정세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야 함.
-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적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일을 이상

적인 한반도의 통일상으로 가설하여 한중 간의 가능한 협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 북중 경험과 남북경협 >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심화는 비록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이기는 하나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건이후의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북중간 경제관계의 심화에 따른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중국 경제에의 예속가능성, 북한의 전략자원(지경학적 위치, 지하자원, 어업자원, 저임노동력 등)에 대한 중국의 선점, 향후 남북한 경제공동체 또는 통일경제의 형성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중간 경제관계의 심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서 북한경제의 안정 및 성장에의 기여, 개혁·개방에의 유도, 통일비용의 절감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양국이 함께 북한 개발계획에 동반 진출하여 실리를 모색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편이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이 될 것임.
- 북중경협의 확대가 남북한 통합·통일경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며, 남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금처럼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북중경협 확대가 남북한 통합·통일경제에 미칠 영향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의 북중경협 확대가 남북한 통합·통일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다를 것으로 전망됨.

< 대북 정책 과제 >

- 현재 중국 정부가 바라는 최적의 상황은 남북한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는 것임.
-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은 중국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며 중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을 중국에 초청하여 중국에 대한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긍정적이 표현들을 축적하게 함으로써 추후 북한의 지도부가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노력하고 있음.
- 과거의 냉전적인 시각이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중국을 바라본다면 중국의 실재와의 괴리는 커질 것이며,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적대감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막고 한반도 비핵화,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중 양자관계를 전망하자면, 천안함 사태와 같은 우연적인 사건, 한중간 행위자 차원의 상호 접촉과 대응과정이 당연히 영향을 줄 것임.
-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 중장기적인 요인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임.
-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나 세계화의 추세 속 비서방국가로서의 정체성 등은 차지하고라도 한중 관계는 안보전략적인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 동북아 국제관계는 현재 미중간의 전략적 협력과 미일동맹에 기초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안보 위주의 냉전구도가 혼재된 상황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상호양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당분간 세계적인 강국은 아니지만 지역 강국으로서 미국과는 협력을 기조로 하면서, 지역 경쟁국인 일본은 일정 정도 견제하고, 한국은 우호적으로 견인하려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임.

- 기존의 대외인식은 미·중간의 전략적 갈등과 경쟁의 구도라는 전제가 근저에 깔려 있지만, 21세기의 현실은 미·중 협력구도 속에 북핵문제 및 북한문제가 논의되고 타결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역내에는 북한 핵문제를 논의할 다양한 형태의 기제가 작동중인데,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이 구조에서 결여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고리는 한중간의 대북 전략대화 및 한·미·중간의 삼자협의체제의 구축임.